

대구신문

대구경북경제통합 조례 본격 논의 시도의회, 8일 안동서 두번째 만남

2007년 03월 02일 001면

도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 조례제정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경제통합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일부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추진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경제통합조례(통합조례)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는 오는 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 소속 도의원들과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통합조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6일 상견례 자리에 이어 시도의회의 두 번째 만남이 안동에서 이뤄진 것은 경제통합에 피해의식을 가진 경북북부지역의 여론환기를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경제통합을 처음 제기한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과 권오상 경북북부지역 혁신연구원장, 김종웅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참석하며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 사무국의 경위 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벌인다.

참가자들은 시도민들이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동, 영주 등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이 경제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적,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도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한 두차례 더 만나 최종안을 마련해 늦어도 4월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재술 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시